금융감독원	**보 도 자 료**	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	부산경찰청 BUSANMETROPOLITANPOLICEAGENCY

보도	2026.11.24.(화) 09:00	배포	2026.11.24.(화)

담당부서				
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	책임자	국 장	임정환	(02-3145-8270)
	담당자	팀 장	장종현	(02-3145-8129)
		팀 장	김민형	(02-3145-8280)
부산광역시 시민생활국	책임자	팀 장	주상현	(051-888-4263)
	담당자	수사관	강영이	(051-888-4264)
부산경찰청 수사과	책임자	과 장	오기덕	(051-899-2065)
	담당자	계 장	김주상	(051-899-2067)
		경 위	조승용	(051-899-2167)

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예방·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금융감독원 – 부산광역시 – 부산경찰청 간 업무협약 체결

Ⅰ. 개 요

□ ’26.11.24.(화) **이찬진 금융감독원장**과 **전재수 부산광역시장**, **김성희 부산경찰청장**은 **불법사금융 근절** 및 **피해예방·지원 협력체계 구축**을 위한 **업무협약**을 **체결** (※ 금감원·지자체·지방경찰청간 최초 협약 사례)

○ 세 기관은 **악랄한 초고금리·불법추심**으로 **서민**의 **경제적·사회적 일상**을 파괴하는 **불법사금융 범죄**에 대해 **강력하고 엄정한 대응**을 **천명**하였으며,

○ ①**정보 공유**, ②**합동 단속**, ③**역량 강화 지원**, ④**피해구제 연계** 및 ⑤**피해예방·대응요령 홍보** 등 **상호 협력 강화**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**업무협약**을 체결하고, 이어서 **주요 수사 성과 사례**를 **공유**하였음

「금융감독원-부산시-부산경찰청 업무협약 체결식」 개요

□ **(일시·장소)** ’26.11.24.(화) 14:00~15:00, 부산시청(7층 국제의전실)

□ **(참석자)** 금융감독원, 부산시 및 부산경찰청 관계자 등

- **[금감원] 이찬진 원장**, 김형원 부원장보, 임정환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
- **[부산광역시] 김성기 행정부시장**, 조영태 시민생활국장
- **[부산경찰청] 김성희 부산경찰청장**, 오기덕 수사과장

시 간	행사 내용
1부: 업무협약식 14:00 ~ 14:30	▸ ① **인사말씀** ▸ ② **협약 체결 및 기념 촬영**
2부: 수사 성과 사례 발표 14:30 ~ 15:00	▸ ① **AI 기반 불법사금융 분석체계**(금감원) ▸ ② **민생경제수사TF팀 추진경과**(부산시) ▸ ③ **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수사사례**(부산경찰청)

Ⅱ. 업무협약 배경 및 주요 내용

□ 최근 부산시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를 위해 '민생경제수사TF팀'을 신설('26.7월)하고, 금융감독원·부산경찰청과 실무협의 추진 등 공동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으며,

○ 부산경찰청의 **상품권 예약판매**를 빙자한 **변종 불법사금융** 수사 성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**관련 피해자**를 **지원중**

○ 금감원은 **부산시·부산경찰청**과 **지속 공조**하며 **협업모델**을 **구축**하고, **민생금융범죄 특사경** 도입시 **신·변종, 조직적 범죄** 등 **수사**를 **추진**할 예정

> ※ **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**
>
> ▶ **(범죄수법)**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불법사채업자에게 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계약
> → 사채업자가 금전을 지불한 뒤, 추후 고금리 이자를 추가한 상품권 상환 요구
>
> ▶ **(피해현황)** 상품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추가 상품권을 요구하고, 오히려 불법사채업자가 상품권 거래사기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
>
> ☞ **금융감독원 피해신고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, 원리금 무효확인서 등 지원가능**

□ 이에, 금감원·부산시·부산경찰청은 **불법사금융** 근절을 위한 **긴밀한 협력**의 **필요성**에 적극 공감하고, 각 기관의 **전문성**을 **융합**하여 **대응체계**를 **더욱 공고히** 하기 위한 **업무협약**을 체결

〈 업무협약 내용 〉

1 정보 공유 강화

▶ **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동향, 신·변종 범죄 수법 등 정보 공유**

2 합동 단속 실시

▶ **신·변종, 조직적 불법사금융 대상 합동 단속 등 공동 대응**

3 역량 강화 지원

▶ **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한 제도 및 수사기법 등 상호 연수 지원**

4 피해구제 연계

▶ **수사 등으로 인지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금감원 원스톱 피해신고 서비스로 연계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**

5 피해예방·대응요령 홍보

▶ **홍보채널 활용을 통한 홍보물 배포 등 공동 홍보 협조**

Ⅲ. 금융감독원장, 부산시장, 부산경찰청장 발언요지

□ (금융감독원장)

○ 금감원은 **고도화된 AI시스템**으로 포착된 **신·변종 불법사금융 수법, 조직적 활동 정황** 등을 **부산시·부산경찰청**에 **신속하게 공유**하고, **필요시 합동 단속**을 **실시**하여 협업하겠음

- 특히, **민생금융범죄 특사경**이 출범하면, **사각지대 없이 강력한 단속**을 **추진**하여 **발본색원**하겠음

○ 또한, 부산시·부산경찰청과 **금감원 피해신고**로의 **연계를 강화**하여 **범죄 유입경로 차단, 원리금 무효확인서 발급** 등 **피해를 신속히 구제**해나가겠음

□ (부산시장)

○ 부산시는 **민생 안전망 구축**을 **최우선 과제**로 두고, 최근 **민생경제 수사TF팀**을 **신설**하여 **불법사금융 수사** 등 **근절**을 추진하고 있으며,

- **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**에서 **업무**를 수행하고 있어, 적시에 **피해**를 인지하고 **지원제도**로 **연계 가능**

○ 특히, **금융감독원**은 **불법사금융 대응체계**와 **금융전문성**을, **부산경찰청**은 **신속한 수사·단속 역량**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,

- 세 기관이 **힘을 모아 불법사금융 범죄**를 **함께 적발**하고, **예방**부터 **신고, 수사, 피해구제**까지 **빈틈없이 대응**할 수 있도록 **협력**하겠음

□ (부산경찰청장)

○ 부산경찰청은 **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대출 등 신·변종 불법사금융을 적극적으로 단속**하고 있으며,

- 서민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**고금리 대출과 불법추심을 엄정 단속**하고 **배후조직**과 **범죄수익**까지 **철저히 추적**하겠음

○ 특히,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, **범죄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** 등 **공동 대응**을 강화하는 한편,

-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**피해자를 피해신고 서비스로 연계**하고, **보복과 추가 피해로부터 보호**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음

Ⅳ. 주요 수사 성과 발표 내용

□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, 금감원AI기반 분석체계 구축, 부산시민생경제 수사TF팀 추진경과, 부산경찰청상품권 예약판매 수사 등 성과를 공유하였음

① [금감원] AI 기반 불법사금융 분석체계

▶ **(내용) 피해신고·제보·민원, 불법금융광고** 등에 산재된 **대량의 범죄정보**를 **AI기반으로 분석**하여 **조직 구조** 등 **파악**

▶ **(효과) 다수 피해자 발생** 또는 **등록대부업체와 연계된 불법사금융** 등 **범죄 혐의**를 **체계적 선별**

▶ **(향후 계획) 경찰·지자체 등 관계기관**과 **정보**를 **공유**하여 **합동 단속**을 실시하는 한편, **민생 특사경 도입시 조직형 불법사금융 추적** 등 **수사에 활용**

② [부산시] 민생경제수사TF팀 추진경과

▶ **(내용)**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'**민생경제수사TF팀**' 신설·특사경을 지명하고,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통해 **수사역량 강화**와 **공조기반 구축**

▶ **(효과) 행정지도·점검 위주에서 벗어나, 시 차원에서 미등록·초고금리 대부 범죄**를 **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틀 마련**

▶ **(향후 계획) 금감원, 경찰청과 지속 공조하여 범죄 검거·송치 등 추진**

③ [부산경찰청]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 수사사례

▶ **(내용) 상품권 예약판매 관련 범죄조직*** **적발**

* 2023년 10월 ~ 2026년 5월까지 최고 3만%에 달하는 이자로 105억원 상당 불법 대출, 갚지 못하면 상품권 사기죄로 3,200건을 허위 고소

▶ **(효과) 불법사금융업자 168명**을 **검거하여 이 중 8명을 구속**하였으며, **채무자 9,700여명이 이용한 인터넷 전용 사이트 8개 폐쇄, 범죄수익 32억원**에 대한 **추징보전 신청, 피해자 약 3,000명 구제제도 연계**

- 허위 고소로 수사 진행중인 피해자 510명 불송치,
부산청 판례를 바탕으로 재판 중인 피해자 2명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

▶ **(향후 계획)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, 재판 또는 형이 확정된 피해자 재심 구제 등 추진**

Ⅳ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□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**불법사금융 범죄**에 맞서 **금융**과 **민생 인프라, 수사** 등 **관계기관간 전문성**을 **연계한 긴밀한 공조체계**를 **구축**함으로써

○ **불법사금융** 및 **불법추심 범죄**를 **근본적으로 척결**하기 위해 보다 **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**하는 한편,

○ **선량한 국민들**이 더 이상 **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일상**을 **지켜나가는 계기**가 될 것으로 기대함

□ 향후 **금융감독원**과 **부산시, 부산경찰청**은 업무협약이 **실현될 수 있도록** 실무협의를 통해 **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** 계획이며,

○ **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예방, 수사, 피해구제 全 단계**에 걸친 **공조체계**를 더욱 **공고**히 하여 관련 **범죄**에 **강력 대응**할 예정임

<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(피해 예방 권고문) >

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(☎1332)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,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(☎1397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연이율 60%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.

※ 한국기자협회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('25.12.29일)한 「**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**」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,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'**피해 예방 권고문**'을 **기사 하단에 게재**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